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정 영 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다소 '비상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참석인원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것이 비상적인 성격을 반증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12기 2차 회의의 경우 올해 예산안과 헌법개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금번 회의에서 시행된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제의로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내각 총리의 소환 및 교체가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의로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 동시에 내각의 여러 성원도 교체되었다. 내각 부총리의 대폭 경질이 이루어졌다. 광범기, 오수용, 박명선이 소환되고 강능수, 김낙희, 이태남, 전하철, 조병주, 한광복이 부총리로 새로 등용됐다. 새로 부총리로 임명된 조병주와 한광복은 기계공업상과 전자공업상을 각각 겸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경공업상에 안정수가, 식료일용공업상에 조영철이, 체육상에 박명철이 새로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통치적 측면과 권력 구조적 측면이 그것들이다.

첫째, 통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총리 및 부총리의 경질, 그리고 경제 부문의 내각 성원들의 교체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부 통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사업무에 치중하면서 경제 등 이외의 업무를 내각에 일임해 왔다. 김 위원장은 군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논리 하에 선군을 강조하면서 경제문제는 도외시 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2차례 단행하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경제문제에 눈을 돌리는 통치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치행태의 변화는 핵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난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측면이 강할 것이다. 이번 경제관련 내각 성원들의 교체는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부총리 숫자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인민생활 관련 부서장(경공업, 식료일용공업상 등)을 교체하여 2012년까지 경제강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드라이브 정책을 치중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사조치는 화폐개혁 여파로 인한 민심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책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숙청에 이어 김영일 내각 총리를 해임함으로써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둘째, 장성택을 국방위원에서 1년 2개월여 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김정일 정권의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권력 정비기(1994-1998)→ 권력공고화기(1998-2009)를 거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권력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권력정비기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일 고유의 권력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단행한 결과 국방위원회 중심의 권력구조가 탄생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은 자연히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어 권력공고화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선군정치하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기반을 굳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외적 협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지도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자신감은 2009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 절(節)의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등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그리고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급 수준으로 강화한 것은 그의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 최고 지도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는 군사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원화되고 수적으로 강화된 조직구성으로 변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당 안보부서(보위부·검찰 등)를 총괄 통제하는 핵심당직을 가진 장성택을 포함해서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 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을 국방위원회에 새로 임명함으로써 수적으로 강화되고 구성상으로도 다원화된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국방위원회가 ‘실제’인 장성택을 포함해서 당 및 치안과 국가보안 기관의 중요한 인물로 보완된 것은 상대적으로 군사부문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정상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추정차원의 것이긴 하지만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 노력의 중심에 장성택 부장이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성택을 통해서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는 권력 유지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권력을 강화하고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으나 군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군대가 권력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대를 지속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의 ‘총폭탄’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에 의한 통제와 충성유도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장성택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를 당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여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 노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 사실이라면 장성택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당과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번 제12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시 단행된 인사조치에서 당중심의 체제정상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중앙위 정치국 제의에 따라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라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최근 당 중앙위 역할 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14일과 5월 1일에는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재등장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부총리 및 내각성원으로 새로 임명된 인사의 다수가 당인물이라는 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제의에 따라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거된 장성택 역시 당중앙위 핵심인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중심의 권력구조 변화가 예견되기도 한다.

